

주간 통일정세

2016-27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7.2	北, 6.25 맞아 '반미투쟁' 선동...자주권 침해시 불소나기(연합뉴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평양시 군민대회 개최(연합뉴스)
		국가기구 격상 北조평통 위원장 누가 맡나(연합뉴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후 본격 '대의 행보'(연합뉴스)
	7.3	北김정은, 평양중등학교원 시찰...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활동(연합뉴스)
		'애연가' 北 김정은, 학교서도 담배 피워(연합뉴스)
	7.4	北매체, 미국이 건드리면 전략군이 불바다 만들 것 위협(연합뉴스)
		北 잇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경축대회(연합뉴스)
		'인민무력상·국무위 설계국'...윤곽 드러나는 北 조직개편(연합뉴스)
	7.5	北, 7.4공동성명 44주년에 "美와 南통치배 자주통일 도전"(연합뉴스)
北 '려명거리' 계획 공개...100여 동 규모, 올해 말 완공(연합뉴스)		
北, 200일전투 첫달 공업 총생산, 계획의 1.2배 달성 주장(연합뉴스)		
7.6	北, 대미 위협수위 왜 높이나...도발 명분 협상 지렛대(연합뉴스)	
	北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후 잇단 민생행보...애민 부각 의도(연합뉴스)	
	北 한광상, 소장에서 중장 진급...7개월 만에 공개석상 모습(연합뉴스)	
	北, 김일성 사망일 하루 앞두고 추모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7.8	北 김정은, 김일성 22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北 외교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실종(연합뉴스)	
	北, 김일성 띄우기...22주기에 "조국통일운동 헌신" 선전(연합뉴스)	
경제	7.2	북한산 석탄,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서 판매(미국의소리)
	7.5	北 유엔제재로 수출막힌 석탄 발전에 사용...전력난 완화(연합뉴스)
		中 북한식당, 대북제재 속 매출격감에 파격 마케팅...할인공세(연합뉴스)
	7.6	中 단둥시, 9일부터 반나절 일정 북한 관광상품 개시(연합뉴스)
		北 려명거리 건설자재 中서 수입(자유아시아방송)
7.7	北,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해외서 매년 1조원 수입(연합뉴스)	
사회 문화	7.2	北주민들 태양 전지판 설치 당국 지시에 불만(자유아시아방송)
		北 마천령서 대형 교통사고...33명 사상자 발생(자유아시아방송)

외교 국방	7.4	北주민들,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몰래 시청(연합뉴스)
	7.5	北, 간첩사건 연루 혐의 주민 300명 체포(자유아시아방송)
	7.8	韓영화 메모리칩 발각 北여대생, 단속 걸려 자살(연합뉴스)
	7.2	中시진펑, 北김정은에 축전 외교...북중관계 복원될까(연합뉴스)
	7.3	6자 당사국 외교수장, 월말 라오스 집결...北 공세외교 예고(연합뉴스)
		北, DMZ 지뢰매설 배로 늘려...軍, 유실가능성 대비(연합뉴스)
	7.4	美 '北에 대량살상무기 기술 제공' 러 기업 5곳 제재(연합뉴스)
		美핵잠수함 오하이오, 日요코스카 기지에...北 견제(연합뉴스)
	7.5	北 "미국, 日자위대 동원해 '범죄적 혼란 감행' 비난(연합뉴스)
		美 전문가 "北 무수단, 광 타격 능력 의심 여지없어"(연합뉴스)
	7.6	푸틴 러 대통령, 北김정은에 축전...대화 협조 확대 기대(연합뉴스)
	7.7	北, 미국의 3차상쇄전략 물거품 만들 능력 있다 주장(연합뉴스)
		美정부 "인권유린 김정은 제재, 실질적 영향 있을 것"(연합뉴스)
		반기문, 방북계획 질문에 "언제든 남북대화재개 위해 공헌"(연합뉴스)
7.8	美정부, 北선전포고 반발에 "도발 삼가라...인권유린 계속 환기"(연합뉴스)	
	美 국무, 北 관리들 자신들 행동 결과 고려해야(연합뉴스)	
	美차관보, 北인권제재 시작 불과...명단에 안오르게 조심하라(연합뉴스)	
		카타르, 북한 노동자에 신규 비자발급 제한(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7. 3.

■ 北김정은, 평양중등학원 시찰…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활동(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활동 장소로 새롭게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택함.
-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시찰)하시였다”고 보도함.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후 ‘현지지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날 시찰에는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수행했으며, 김수길 평양시위원회 위원장이 현지에서 이들을 맞음.

■ ‘애연가’ 北 김정은, 학교서도 담배 피워(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활동 장소로 학교를 시찰하면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남.
- 3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김정은의 평양중등학원 현지지도 사진 모습에는 김정은이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 구내를 둘러보거나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여러 장 나옴.
- 이런 김정은의 행동은 올해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하면서 대대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

2016. 7. 6.

■ 北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후 잇단 민생행보…애민 부각 의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활동 장소로 보육시설을 시찰한 데 이어 두 번째 장소로 자라 양식공장을 택함.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면서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1년 동안에 희한하게 천지개벽 되었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보도함. 먹을거리와 관련

한 자라 양식공장을 찾은 것은 인민의 민생고를 직접 챙기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보임.

- 김정은의 시찰에는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한광상 당 중앙위 후보위원이 동행함.

2016. 7. 8.

■ **北 김정은, 김일성 22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2주기(7월 8일)를 맞아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 앞에서 경의를 표한 뒤 김 주석의 영생홀을 둘러봤다고 밝힘.
-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5년 연속 할아버지인 김 주석의 기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7. 6.

■ **北 한광상, 소장에서 중장 진급…7개월 만에 공개석상 모습(연합뉴스)**

- 한 때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한광상(59) 인민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6일 확인됨.
-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평양자라공장 시찰 사진을 보면 한광상은 중장 계급장의 군복 차림으로 김정은을 수행함.
- 한광상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 27일(보도일 기준) 김정은의 원산구두공장 시찰을 수행한 이후 약 7개월 만임. 당시 그의 계급은 소장이었음.

2016. 7. 8.

■ **北 외교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실종(연합뉴스)**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 외교관 1명이 실종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올해 40세인 북한 3등 서기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정오께 관용차로 일을 보러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러시아 경찰의 그의

행방을 찾고 있음.

-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쪽에 있는 바실리브스키 섬에는 북한 대사관 산하의 무역 및 경제 관계 담당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7. 2.

■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평양시 군민대회 개최(연합뉴스)

- 북한은 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를 개최함.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9시 24분께부터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대회를 녹화 실황 중계함.
- 행사장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이 모습을 드러냄.
- 북한은 이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상’으로 호칭함.

■ 국가기구 격상 北조평통 위원장 누가 맡나(연합뉴스)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구'로 격상되면서 위원장을 비롯한 인적 구성에 관심이 쏠림.
- 통일부는 2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기구인 조평통을 설치한 데 대해 “외곽기구인 조평통을 공식적인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조평통으로 대남정책·대화 관련 조직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전망함.
- 조평통은 1961년 5월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로 설립됐으며, 이후 남한 내부와 해외 인사들의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대남 선전공세를 펼치는 임무를 수행해 옴.

2016. 7. 4.

■ 北 잇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경축대회(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경축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지난 3일 평안남도 평성과 나선시에서 군민(軍民) 경축대회가 열렸다면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다”고 4일 보도함.
- 이어 신문은 “군민 경축대회에서는 박태성 평안남도 당 위원장과 림경만 나선시 당 위원장의 경축보고에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고 밝힘.

■ ‘인민무력상·국무위 설계국’…윤곽 드러나는 北 조직개편(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달라진 북한의 조직개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북한은 최고 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고수위 추대’를 비롯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국무위원회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철저 수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출범, 조직 문제 등 6가지 의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조직 문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국가 최고 기관으로 기존의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되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폐지하고 국가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힌 정도임. 이런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의 개최 3일 만인 지난 2일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를 축하하기 위한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 참가자들을 소개하면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상 육군대장’이라는 직함으로 언급,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상으로 명칭을 바꿨음을 시사함.
-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남정책·대화 관련 조직으로 조평통을 출범시킴에 따라 기존의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2016. 7. 5.

■ 北 ‘려명거리’ 계획 공개…100여 동 규모, 올해 말 완공(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4월 착공한 평양 ‘려명거리’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함.
-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 ‘금수강산’은 7월호에 ‘려명거리 건설지휘부 일꾼 김진성’의 인터뷰를 게재함. 건설 규모에 대해 “40여 동 살림집과 60여 동 공공건물을 건설하고 수십여 개 대상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살림집 중에는 70층, 55층, 50층, 40층, 35층을 비롯한 초고층 살림집과 7~8층짜리 살림집도 있다”고 설명함.
- 김정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인 3월18일(보도시점)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 사이 려명거리 건설을 지시함. 이에 따라 이 구역에 김일성종합대 교육자들과 과학자, 연구자를 위한 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임.

2016. 7. 7.

■ 北, 김일성 사망일 하루 앞두고 추모 분위기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 22주기(7월 8일)를 하루 앞둔 7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추모 분위기를 띄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서 마지막 면인 6면 까지 김일성 관련 기사를 배치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김 주석의 업적을 칭송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사실과 핀란드, 인도네시아, 앙골라 등지에서 김 주석 회고모임이 진행됐다고 추모 분위기에 가세함.
- 조선중앙방송은 김 주석의 서거 22돌을 맞아 지난 6일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 농업 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맹세모임이 각각 만수대 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위대한 태양, 자애로운 아버지’ 등 여러 글을 통해 추모 분위기 띄우기에 나섬.

2016. 7. 8.

■ 北, 김일성 띄우기·22주기에 “조국통일운동 헌신” 선전(연합뉴스)

- 북한은 8일 김일성 주석 22주기를 맞아 김 주석의 ‘조국통일운동 헌신’에 대한 선전을 강조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5면 상단의 김 주석 추모 시설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바쳐가신 아버지수령님의 눈물겨운 노고와 헌신이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물리치며 힘찬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역설함.
-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사설에서 “민족최대의 추모일에 즈음하여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 불면불휴의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분위기를 띄움.
-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조국통일업적’,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끝없는 헌신의 마지막 하루’ 등 여러 관련 글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가세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7. 2.

■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후 본격 '대외 행보'(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북중 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음.
- 북한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친선을 강조한 '러브레터(축전)를 주고받은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고, 쿠바특사 일행의 김 위원장 면담 장면을 기록영화로 제작해 이례적으로 재빨리 공개하는 등 대외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괌 기지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내보내고 연일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음.
- 대북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 전까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 능력과 군사대국 이미지를 과시했다”면서 “하지만 7차 당 대회 후에는 친북 국가들을 대상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의 부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순방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함.

2016. 7. 3.

■ 北매체, 미국이 건드리면 전략군이 불바다 만들 것 위협(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전략군절을 맞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전략군은 침략의 아성은 물론 도처에 널려진 미제침략군기지들을 모조리 불바다로 만들어놓을 것”이라고 위협함.
- 신문은 이날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군 전략군은 가장 강위력한 타격무력이며 믿음직한 핵보검”이라며 이같이 말함.
- 신문은 또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 아래 전략군은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 원수들이 그 어디에 있는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진 세계최강의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함.

2016. 7. 4.

■ 北, 7·4공동성명 44주년에 “美와 南통치배 자주통일 도전”(연합뉴스)

-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 44주년을 맞아 4일 미국과 우리 정부가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지향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7·4 공동성명 관련 논설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정확한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면서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선전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것이였다”며 “북과 남이 서로 불신과 대결을 지속한다면 전쟁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공세를 펴.
- 또 북한 인터넷 선전매체 ‘메아리’는 “현 남조선당국은 통일원칙을 전면거부하고 있으며 통일과 화해,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6. 7. 5.

■ **北, 200일전투 첫 달 공업 총생산, 계획의 1.2배 달성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속도전 사업 ‘200일 전투’의 첫 달 성과를 발표하며 전국 공업 총생산액이 애초 계획의 1.2배를 달성했다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만리마시대의 새 승리를 향한 연속공격전의 거세찬 불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경제전선에서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되고 수도의 려명거리와 대건설장들에서 눈부신 건설속도가 창조되어 전국적으로 첫 달 공업총생산액계획이 120%로 넘쳐 수행되였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신문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4대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의 노동계급이 대고조의 전열에서 200일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면서 전력생산 120%, 석탄생산 140%, 철도운수 화물수송 120%로 애초 계획을 각각 초과 완수했다고 강조함. 다만, 4대 선행부문의 하나인 금속공업에 대한 성과 수치는 제시되지 않음.

■ **北, 대미 위협수위 왜 높이냐..도발 명분 협상 지렛대(연합뉴스)**

-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그 속셈이 주목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은 미군이 지난달 중순 장거리 폭격기 B-52 2대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범죄적인 합동핵공격훈련을 감행했다”고 비난함. 그러면서 통신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대화하는 장본인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할 그 어떤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주장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를 시작하면서 강경한 대외 입장을 통해 내부 결속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이런 흐름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7. 5.

■ 北 유엔제재로 수출 막힌 석탄 발전에 사용·전력난 완화(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전력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이는 대북제재에 따라 석탄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북한이 이를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임.
- 북한 경제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도쿄신문에 “수출 길이 막힌 석탄을 북한 발전소 가동에 사용하도록 해서,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7. 2.

■ 북한산 석탄,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서 판매(미국의소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교역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북한경제 전문 매체 ‘노스 코리아 이코노미 위치’는 3~4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에서 북한산 석탄을 판매하고 있다고 최근 밝힘.

-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석탄이나 갈탄 같은 광물성 고형 원료의 비중이 40%에 달했고 이 물량의 97%는 중국에 팔렸다고 방송은 전함.

2016. 7. 5.

■ 中 북한식당, 대북제재 속 매출격감에 파격 마케팅...할인공세(연합뉴스)

- 중국내 북한 식당들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양주를 갖추고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 5일 중국 라오닝(遼寧)성 등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 북한식당들은 최근 한국인 손님 대신에 중국인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음. 지난 3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우리 정부의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방침 등으로 한국인들이 크게 감소하자 판촉대상과 판매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임.
- 선양의 한 소식통은 “예전엔 미인 종업원의 환대를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던 북한식당이 북한 군부와 노동당 등의 자금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현지인들의 발길이 줄고 있다”고 말함.

2016. 7. 6.

■ 中 단둥시, 9일부터 반나절 일정 북한 관광상품 개시(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오는 9일부터 반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상품을 개시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VOA는 “단둥시는 지금까지 번거로웠던 북한 입국 절차를 간략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면서 “여권과 입국사증이 필요 없고,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통행증을 만들어준다”고 전함.
- 이밖에 중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와 협력하는 ‘두만강 국제관광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국홍콩성운투자주식유한공사는 단독으로 북한의 백두산지구관광과 무봉국제관광 특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北 려명거리 건설자재 중서 수입(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4월 착공된 평양 려명거리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려명거리 공사는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건설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으므로 김정은의 의도대로 금방 완공될 공사가 아니다”라며 “자재수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함.

- 려명거리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영흥사거리까지 동서로 난 도로에 건설 중인 새로운 시가지로, 이 구역에 김일성종합대 교육자들과 과학자, 연구자를 위한 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임.

2016. 7. 7.

■ **北,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해외서 매년 1조원 수입(연합뉴스)**

- 북한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됨.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주최한 ‘제14회 국방정보보호·암호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서 “북한은 사이버도박업체 운영과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등으로 연간 1조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함.
- 유 원장은 향후 북한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며 사이버안보 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온라인 압수수색을 법제화하는 한편 군 형법도 개정해 사이버 안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6. 7. 5.

■ **北, 간첩사건 연루 혐의 주민 300명 체포(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주민 3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위부는 지난 5월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돈을 받고 한국에 국가비밀을 팔아먹은 자들은 일주일 내에 자수하라고

공개 협박했다”면서 “지수한 주민이 없자 국가보위부는 함경북도 온성군과 회령시, 청진시와 셋별군 일대에서 하루 동안 30여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말함.

- 방송은 “국가보위부가 송금브로커 기록을 구실로 다른 조직을 제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심을 조성해 한국과 연계된 주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인지 실체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임.

2016. 7. 8.

■ **韓영화 메모리칩 발각 北여대생, 단속 걸려 자살(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주민을 상대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한 여대생이 불법 영상물 시청 이유로 단속당해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이 매체에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동에서 자취생활을 하던 여대생(23)이 ‘109 상무’의 가택수색으로 한국영화가 저장된 메모리칩이 발견돼 끌려갔다”며 “단속에 걸리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뿐더러 최소한 10년 이상 교화형을 살게 될 것을 우려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소식통에 따르면 109 상무는 불법 영상물 단속을 전문으로 당 보위부 검찰 보안인민위원회 요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주민 자택에 기습적으로 들이쳐 무차별 검열을 벌임. 109 상무 사무실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짐.

라. 사회 동향

2016. 7. 2.

■ **北주민들 태양 전지판 설치 당국 지시에 불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전력난 해결의 한 방편으로 태양열 전지판 설치를 지시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의) 각 병원과 체신소, 학교 등 1급 시설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각 기관 단위에서 직원들과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10대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이 발전된 서유럽 나라처럼 북한에서도 청정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려고 구상한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임.

■ **北 마천령서 대형 교통사고…33명 사상자 발생(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함경남북도를 연결하는 마천령에서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2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RFA와 통화에서 “5월 중순 마천령에 뚫어놓은 차굴(터널)을 피해 높은 고개를 에돌던 버스 1대가 굴러 승객 2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다”며 “이들은 차굴 통과료를 내지 않으려고 위험한 고개를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말함.
- 소식통은 “몇 해 전에도 평양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함경북도 시·군 간부들 수십 명이 이 고개에서 버스가 추락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마천령은 예로부터 운전자들 사이에 ‘생사의 경계선’으로 불렸다”고 덧붙임.

2016. 7. 4.

■ **北주민들,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 몰래 시청(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주민을 상대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 NK가 4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최근 젊은 청년들 속에서 ‘태양의 후예’라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시청하고 있다”면서 “이 드라마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 그러면서 “(주민들은) 200일 전투의 쌓인 피로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가요를 감상 하면서 해소한다”며 “한류의 확산으로 볼거리가 없는 조선중앙TV를 외면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7. 4.

■ **美, ‘北에 대량살상무기 기술 제공’ 러 기업 5곳 제재(연합뉴스)**

-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생산 기술을 제공한 혐의로 3개 러시아 기업이 미국의 제재 목록에 새로 올랐다고 타스 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북한-이란-시리아로의 WMD 확산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주(州)의 제150 항공기 수리 공장, 모스크바 인근

콜롬나의 기계설계소, 모스크바의 쿠체보 설계소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함.

- ‘북한-이란-시리아로의 WMD 확산 방지법’ 관련 제재 목록엔 러시아 기업 외에도 벨라루스,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당사국인 이란, 시리아, 북한 등 10개국 38곳이 포함됐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는 밝힘. 이 법은 2000년 이란을 상대로 먼저 채택됐고, 뒤이어 2005년에 시리아, 2006년에 북한이 대상 국가로 지정됨.

■ **美핵잠수함 오하이오, 日요코스카 기지에…北 견제(연합뉴스)**

-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됨.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는 원자력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 기지에 기항했다고 지난달 30일 트위터에서 밝힘.
- 오하이오호 배치는 북한이 지난달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BM-25)을 발사하고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에 대처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시사한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해군 제7함대는 오하이오호의 기항이 지역 내 안정을 촉진하고 동맹국 등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016. 7. 5.

■ **北 “미국, 日자위대 동원해 ‘범죄적 훈련’ 감행”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미군이 지난달 중순 장거리 폭격기 B-52 2대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범죄적인 합동핵공격훈련을 감행했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은 5일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2대의 B-52 전략폭격기들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 일본주둔 미 해병대 등과 함께 유사시를 가정한 전략 지역으로의 전개 및 핵타격연습을 벌여놓았다 한다”고 비난함.
- 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대화하는 핵위협외의 장본인, 긴장 격화의 주범이며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할 그 어떤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6. 7. 7.

■ **北, 미국의 3차상쇄전략 물거품 만들 능력 있다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에 ‘3차 상쇄전략’ 적용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얼마전

미국 조지타운종합대학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가한 미국의 전직관리들과 동아시아전문가들이 조선반도(한반도)에 '3차 상쇄전략'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그보다 더한 것을 고안해낸다고 해도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

- 대변인은 "상용무역, 핵무력과 함께 첨단군사장비들을 총동원해 우리를 압살하려는 극단적인 적대시책동의 표현"이라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유지책동을 노골화해보려는 음흉한 속심의 발로"라고 비난함.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전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보지 않으려거든 우리의 전략적지위와 시대의 변화를 똑바로 보고 심각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 **美정부 "인권유린 김정은 제재, 실질적 영향 있을 것"(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인권유린 혐의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 상징적이면서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함.
- 이날 미 국무부의 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압제적인 북한 정권 아래 자행된 가장 나쁜 일들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제재하는 가장 포괄적인 노력"이라고 말함.
- 미 정부는 바시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국가원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등 다른 나라의 잔·현직 지도자들을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음.

2016. 7. 8.

■ **美정부, 北선전포고 반발에 "도발 삼가라...인권유린 계속 환기"(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첫 인권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도 계속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환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연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삼갈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함.
-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을 직접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외무성은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함.

■ **美 국무, 北 관리들 자신들 행동 결과 고려해야(연합뉴스)**

- 북한의 모든 관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경고함.
- 케리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힘. 그는 “북한 관리들이 자신들 행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케리는 회견에서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김 위원장을 압박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힘.

■ **美 차관보, 北 인권제재 시작 불과...명단에 안오르게 조심하라(연합뉴스)**

-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린 데 대해 “그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함.
-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한 연합뉴스·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명단을 6개월 마다 갱신하라는 게 의회의 요구”라며 “앞으로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명단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이번 제재로 북미 대화가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어떠한 기회에도 관심이 있다”며 “이 조치가 외교를 통한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재에 대한 오해”라고 강조함.

나. 북·중 관계

2016. 7. 2.

■ **중시진핑, 北 김정은에 축전 외교...북중관계 복원될까(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추대 축전을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얼어붙은 북중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을 끌고 있음.
- 시 주석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강조함. 하루 앞선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도 시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창건 9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축전을 보낸 바 있음.
- 관측통들은 특히 시 주석이 지난달 1일 김 위원장의 특사격으로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당중앙 부원장을 만난 데 이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축전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관계 복원의 문이 열린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임.

- 북중접경의 또다른 관측통은 “시 주석의 축전은 김 위원장의 기념 축전에 대한 답장의 성격”이라면서 “북한이 핵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중관계는 복원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6. 7. 6.

■ 푸틴 러 대통령, 北김정은에 축전...대화 협조 확대 기대(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
-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보낸 축전에서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해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푸틴 대통령은 이어 “국가 최고 직책에서 당신의 활동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확대하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임.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7. 3.

■ 6자 당사국 외교수장, 월말 리오스 집결...北 공세외교 예고(연합뉴스)

- 남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 외교 수장들이 이달 하순 리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례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임. 국제사회 대북 압박 공조의 고삐를 죄려는 한미와 새 외교수장을 내세워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를 시도할 북한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임.
- 리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는 오는 26일 제2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필두로 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이 잇따라 열림.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신임 외무상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 대부분이 비엔티안을 찾아 각종 양다자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됨.

2016. 7. 7.

■ 반기문, 방북계획 질문에 “언제든 남북대화재개 위해 공헌”(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7일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언제든, 무엇이 됐든, 긴장 완화와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항상 공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반 총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방북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함 이는 암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반 총장이 여전히 방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됨.
- 반 총장은 작년 5월 방한 때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돌연 방북하기를 철회하는 바람에 방북이 무산됨.

2016. 7. 8.

■ 카타르, 북한 노동자에 신규 비자발급 제한(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동의 카타르도 자국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소식통은 8일 “카타르가 대북 압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함. 카타르 내에는 2천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다만 카타르 당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현지 업체들의 사정을 일부 고려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신규 비자발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7. 3.

■ 北, DMZ 지뢰매설 배로 늘려…軍, 유실가능성 대비(연합뉴스)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지뢰 매설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짐. 군 관계자는 3일 “북한이 지난 4월부터 DMZ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양이 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는 모두 4천 발이 넘으며, 매설 지뢰의 70~80%는 탐지가 어려운 목함지뢰인 것으로 전해짐. 물에 잘 뜨는 목함지뢰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실돼 남쪽으로 내려오면 민간인이 다칠 우려가 있어 군이 집중적으로 탐지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유실돼 남쪽으로 흘러올 가능성에 대비해 지뢰 탐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함.

2016. 7. 5.

■ **美 전문가 “北 무수단, 꺾 타격 능력 의심 여지없어”(연합뉴스)**

-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이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 주장함.
- 브루스 벡틀 국제한국학회 (ICKS) 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수단이 꺾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은 50개의 발사대에 200기의 무수단을 갖고 어디서든 이를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벡틀 회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기를 꺾을 향해 동시에 발사했을 때 5기를 공중에서 타격하고 1기만 떨어진다 해도 적어도 8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매우 쉽지 않다”고 분석함.
- 대북 제재에 대해 벡틀 회장은 “방코델타아시아(BDA)처럼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을 지정해 미 달러가 더 이상 이런 은행들에 갈 수 없도록 하면 된다”면서 “유럽연합과 한-미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을 옥죄 수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왜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 위협론을 제기했지만,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해법”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외부의 바른 정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6	한미 해병대 1천300여명 '北 핵심시설 타격 훈련'(연합뉴스)	
	7.7	한미일, 14일 하와이서 외교차관협의회...北위협 대응책 논의(연합뉴스)	
	7.8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오직 北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4	동해해경본부, 북 러수역 이동 중국어 선 경비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7.4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WTO 제소 절차 돌입(연합뉴스)	
	7.4	국방부, 日대사관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軍인사 참석(연합뉴스)	
	7.5	아사히 "한일, 이달 중순 아셈계기 정상회담 조율"(연합뉴스)	
한일 관계	7.5	외교부, "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내부적 준비'(연합뉴스)"	
	7.7	국방부 "일본 자위대행사 참가, 한일 국방교류 차원"(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3	미국, 중국과 전쟁 시 F-35, F-22 스텔스기 우선 투입(연합뉴스)	
	7.6		中 남중국해 군사훈련 역대 최대규모... 美 겨냥(연합뉴스)
		中 외교원로, 美항모 10척 남중국해 와도 겁나지 않는다(연합뉴스)	
	7.7		中왕이, 美케리에 남중국해 경고...익살극 그만 끝내야(연합뉴스)
		美구축함 3척, 中남중국해 인공섬에 근접항행...미중 긴장고조(연합뉴스)	
7.8		<사드배치 결정> 中외교부, 단호한 반대...中전략적 이익 훼손(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7.3	美日, 'SOFA 적용' 군무원 범위 축소 합의(연합뉴스)	
	7.5	美·日, 주일미군 군무원 위법행위 때 日 재판대상 확대 합의(연합뉴스)	
	7.8		<사드배치 결정> 일본, 한미 결정 지지...지역 안정·평화 기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7		러시아, 립팩훈련 감시위해 정보함 급파(연합뉴스)
	7.8	미 외교관·러 경찰관 '레슬링'...경위 놓고 양국 신경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7.2		日,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 수용 촉구 G7 성명 추진(연합뉴스)

	7.5	中日 전투기, 지난달 센카쿠 부근 상공서 살벌한 대치(연합뉴스)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7.4	신밀월 중국-러시아, 대규모 대테러 합동훈련 돌입(연합뉴스)	
	7.5	시진핑-푸틴, 中공산당 해외대회 전시관 개관 축하...밀월과시(연합뉴스)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7. 6.

■ 한미 해병대 1천300여명 '北 핵심시설 타격' 훈련(연합뉴스)

- 한미 양국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의 후방 해안으로 침투해 내륙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진행 중임. 특히, 이번 훈련은 양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모든 병과기능을 통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어느 때보다 실전적인 방식으로 이뤄짐.
- 해병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훈련장에서 연대급 '한미 연합 공지(空地)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힘.
- 이번 훈련에 참가한 신속기동부대 김희민 대대장은 "한미 해병대는 한미동맹의 최선봉에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라며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적의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함.

2016. 7. 7.

■ 한미일, 14일 하와이서 외교차관협의회...北위협 대응책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내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함.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일정을 공식으로 발표함.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을 평가하고 3국 간 북한 미사일 위협 정보공유 등 철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의 제소로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오는 12일 오전 판결을 내릴 계획임.

2016. 7. 8.

■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오직 北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함.

-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함.
- 내년 말께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임.
- 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임.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함.

나. 한·중 관계

2016. 7. 4.

■ 동해해경본부, 북·러수역 이동 중국어선 경비 강화(연합뉴스)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7월 들어 중국어선이 본격적으로 동해상을 통해 북·러시아 수역으로 조업 차 이동함에 따라 감시경비를 강화함. 중국어선이 이동 중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과 우리 어민과의 조업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임.
- 5월 말께부터 시작한 중국어선 이동은 6월 말까지 총 254척이 부상함.
- 중국어선 조업으로 연간 생산 감소액과 오징어 가공품 생산 감소액이 430억~800억 원에 이르고, 연관산업 피해액 200억 원대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고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있음.

다. 한·일 관계

2016. 7. 4.

■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WTO 제소 절차 돌입(연합뉴스)

-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반덤핑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 제소 절차에 돌입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내린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힘.
- 산업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국방부, 日대사관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軍인사 참석(연합뉴스)**

- 주한 일본대사관이 오는 12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우리 군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짐.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해(서울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국장, 과장급이 참석했다”며 “올해도 그런 수준에서 참석할 것으로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힘.
- 주한 일본대사관은 이달 1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대사관은 2014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켰고 작년에는 이를 의식한 듯 대사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음.

2016. 7. 5.

■ **아사히 “한일, 이달 중순 아셈계기 정상회담 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이달 중순 다자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함.
- 한일 양국 정부는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함. 군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간 합의(작년 12월 28일)의 이행을 진전시키는 측면에서 일본 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거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함.
-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군위안부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 **외교부, “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내부적 준비”(연합뉴스)**

- 외교부는 5일 일본이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과 함께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한 지 1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한일 양자 차원은 물론이고 유네스코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 측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오고 있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의 협의 등 가능한 모든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우리 측의 이행촉구 때마다 일본 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면서 “비록 가시적 이행조치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일본 내부적으로 일부 관련 이행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6. 7. 7.

■ 국방부 “일본 지위대행사 참가, 한일 국방교류 차원”(연합뉴스)

- 국방부는 오는 12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개최하는 지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우리 군 인사를 파견하는 것은 한일간 국방교류 차원이라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주한 일본대사관의 초청을 받아(지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예년 수준에서 참가할 예정”이라며 “순수하게 상호 국방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함.
- 문 대변인은 “작년에 준해 국장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할지는 언급하지 않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7. 3.

■ 미국, 중국과 전쟁 시 F-35, F-22 스텔스기 우선 투입(연합뉴스)

-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F-35, F-22 등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우선 투입해 항공력 우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미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밝힘.
-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원에 따르면 제프 해리건 미 공군 소장과 맥스 마르스코 대령은 오는 2026년 미·중 간의 가상전 상황을 토대로 한 기고문에서 “F-15나 F-16 같은 4세대 전투기를 투입하면 중국군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방어망을 은밀하게 뚫고 침투해 타격을 가하는 데는 F-35와 F-22 등 스텔스기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봄.
- 가상전 상황이지만 이런 전망은 스텔스 전투기가 전투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차원을 떠나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고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디펜스 원은 전함.

2016. 7. 6.

■ **中 남중국해 군사훈련 역대 최대규모…美 겨냥(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5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시작한 군사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남중국해 방어를 담당하는 남해함대 소속 함선은 물론 북해함대, 동해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도 동원됨. 이들 함정은 이달 초부터 하이난(海南)섬 주변에 결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한 군사 평론가는 산케이에 “PCA가 중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미군이 이 해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훈련은 미군과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사태까지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함.

■ **中 외교원로, 美항모 10척 남중국해 와도 겁나지 않는다(연합뉴스)**

- 미국에 간 중국의 외교원로 다이빙궈(戴秉國·75) 전 국무위원이 “미국의 항공모함 10척이 남중국해에 와도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냄.
- 다이 전 국무위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과 중국 인민대간 남중국해 문제 대화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앞둔 중국의 결연한 입장을 재차 강조함.
- 다이 전 국무위원은 중국은 줄곧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의해 피해를 겪어 왔었다고 역설한 뒤 “중국은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이 없다. 중국에 야심이 있다면 중국 자기의 일이나 잘하는 것이고 14억 중국인의 체면을 세워주고 존중받는 날이 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함.

2016. 7. 7.

■ **中왕이, 美케리에 남중국해 경고…익살극 그만 끝내야(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며 경고메시지를 보냄.
- 7일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중국해 중재안은 절차, 법률, 증거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부회이자 허점투성이”, “(PCA의) 권한확대, 월권(행위)”라고 주장함. 또 중재법정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법률과 사실을 무시한 판결은 당연히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임.
- 중국 외교부는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이 밝힌 중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했다’, ‘각국이 자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도 각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美구축함 3척, 中남중국해 인공섬에 근접항행...미중 긴장고조(연합뉴스)**

-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근처에서 미국 구축함 3척이 2주간에 걸쳐 은밀하게 근접 항행을 해왔던 사실이 확인됨.
- 미국의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7일 미 해군의 스테덤, 스프루언스, 몸센 구축함이 지난 2주 동안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근해의 14~20해리 이내로 순찰 항해했다고 보도함. 신문은 해군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이들 구축함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쩌엥사군도·필리핀명 칼리얀군도)에서도 순찰 항해했다고 전함.
- 미국의 이런 순찰 항행은 중국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결을 앞두고 5일부터 11일까지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맞춰 이뤄짐.

2016. 7. 8.

■ **<사드배치 결정> 中외교부, 단호한 반대...中전략적 이익 훼손(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8일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 중국당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따라 중국당국이 양국의 사드 배치를 중단 지연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곧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반도(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힘. 이어 미국과 한국의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안정에도 불리한 것이라며 “각 국가와의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과 봉황망(鳳凰網) 등 중국언론들도 이날 오전 “한미 당국이 한반도에 설치된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한 줄짜리 간접뉴스로 타전하며 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나. 미·일 관계

2016. 7. 3.

■ **美日, ‘SOFA 적용’ 군무원 범위 축소 협의(연합뉴스)**

- 미일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중 범죄시 미국 형사사법 절차의 적용을

- 먼저 받는 주일 군무원(군속)의 범위에서 일본 재류(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함.
- 양측은 미 군무원 범위를 ▲미국 정부 예산으로 고용된 주일 미군을 위해 근무하거나 미군의 감독하에 있는 민간인 ▲미군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민간인 ▲미국 정부의 피고용자로서 미군 관련 공식 목적을 위해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로서 주일미군의 공식 초청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이와 동시에 마일은 일본 재류 자격을 가진 보통의 거주자는 군무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2016. 7. 5.

■ 美·日, 주일미군 군무원 위법행위 때 日 재판대상 확대 합의(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5일 주일미군 군무원 가운데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최근 들어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縄) 기지 등지의 군무원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면서 현지 여론이 악화하자 일본 측이 강하게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임.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과 만나 이런 방안에 합의함.
- 양국은 앞으로 몇 달간에 걸쳐 세부 내용을 추가 협의해 합의문을 만들 계획임.

2016. 7. 8.

■ <사드배치 결정> 일본, 한미 결정 지지...지역 안정·평화 기여(연합뉴스)

- 일본은 8일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힘.
-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하기우다 부장관은 “한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
- 그는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에 의해 배치가 결정된 것이므로, 제3국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함.

다. 미·러 관계

2016. 7. 7.

■ 러시아, 림팩훈련 감시위해 정보함 급파(연합뉴스)

-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 ‘2016년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을 감시하기 위해 러시아 정보함이 급파된 사실이 미군 당국에 포착됨.
- 미군은 러시아 정보함이 하와이 인근 공해 상에서 림팩 훈련을 염탐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미국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USNI 뉴스가 6일(현지시간) 전함. 미 해군은 이 정보함을 러시아 극동함대가 주둔해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발잠급 정보함 ‘프리발티카(SSV-80)로 추정하고 있음.
- 올해 25회째인 림팩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 간 해상교통로 보호, 연합전력의 상호 작전능력을 증진하고자 미 해군의 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격년제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임.

2016. 7. 8.

■ 미 외교관·러 경찰관 ‘레슬링’…경위 놓고 양국 신경전(연합뉴스)

-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러시아 경찰관과 미국 외교관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두고 양국이 맞서고 있음.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NTV방송은 이날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 건물 입구에서 벌어진 싸움 장면을 방송함.
- 미국 국무부는 NTV가 해당 영상을 방송한 이후 논평을 내고,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받아 온 대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러시아 정보 요원과 교통경찰들의 괴롭힘과 감시가 심각하게 증가했고, 이번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함.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경찰관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며, 남자를 검문하려 할 때 팔꿈치로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함. 또 이 대사관 직원은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고 당시 정보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서 변장을 하고 있었다며 미국이 사건에 대해 왜곡되거나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고 비난함.
- 이 주장에 대해 커비 대변인은 “승인받은 미국 외교관”이라고 반박했고, CIA는 답변을 거부함.
- 국무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2014년 이후 미국과 서방 외교관들에 대한 러시아의 괴롭힘이 증가했다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6. 7. 2.

■ 日,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 수용 촉구 G7 성명 추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중재재판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당사국에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함.
- G7의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과 필리핀 등 관련국이 중재재판 결과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G7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각국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함.
- 명목상 중국과 필리핀 양측 모두에 촉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로 풀이됨.

2016. 7. 5.

■ 中日 전투기, 지난달 센카쿠 부근 상공서 살벌한 대치(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지난달 중순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부근 상공에서 험악한 대치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됨.
- 5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 관계자'는 중국측 군용기가 최근 센카쿠로 남하하는 일이 여러차례 발생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17일 센카쿠 상공에서 벌어진 양국 전투기의 대치 상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함. 이 관계자는 당시 중국 군용기가 센카쿠 쪽으로 남하하자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가 긴급발진해 경고를 보냈지만, 중국 측 군용기가 즉각 철수하지 않아 양측이 서로 수차례 정면 대치했다고 설명함.
-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자신들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음. 일본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중국 군용기가 센카쿠 쪽으로 접근하면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켜 대응하고 있음.

마. 중·러 관계

2016. 7. 4.

■ 신밀월 중국-러시아, 대규모 대테러 합동훈련 돌입(연합뉴스)

-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3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대규모 대(對)테러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함.
- 오는 14일까지 12일간 모스크바와 스몰렌스크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중국의

무장경찰부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창설한 국가근위대 대원들이 각각 40여명씩 참가함.

- 중국과 러시아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서방과의 대결에서 보조를 함께하면서 신밀월 관계를 구축했으며 잦은 정상회담과 상대국 열병식 참석,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음.

2016. 7. 5.

■ **시진핑·푸틴, 中共산당 해외대회 전시관 개관 축하·밀월과시(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중국 공산당 6차 전국대표대회(전대) 개최지에 세워진 상설 전시관 완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냄.
-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88년전 중국 공산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140명의 대표들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6차 당대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개최된 당대회였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도 이번 상설전시관은 양국 역사에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양국 전문가들이 수년간 공동으로 노력해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말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7.4	中, 북중접경 탈북자 지원단체 한국인 활동가 수십명 추방(연합뉴스) 개소 1주년 맞은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미국의소리)
	7.6	김정은 적시된 美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 금주중 나올듯(연합뉴스) 유럽, 북한노동자 인권유린 대책마련 시급(자유아시아방송) 폴란드내 북한노동자, 北 정권 외화획득 수단·차단 나서야(연합뉴스)
	7.7	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직접제재...개인 15명·기관 8곳 인권제재(연합뉴스) 中, 김정은 인권제재 관련 “공개적 압력·적대시 정책 반대”(연합뉴스) 김정은 첫 직접제재에 日정부, 환영...北인권문제 관계국과 연대(연합뉴스) 북 해외노동자 인권 탄압에 국제 사회 압력 강화(연합뉴스) 유럽북한인권단체 “北, ‘국가 지원 노예’ 유럽에 보내”(연합뉴스) 북한인권단체, 남북인권대화서 국군포로 송환문제 다뤄야(연합뉴스)
	7.8	반기문, 北인권 개선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 영향력 기대(연합뉴스) 고달픈 외화벌이 北노동자...가족에게 1년간 한푼도 못 보냈다(연합뉴스) 인권유린실태 고발한 美 북한인권보고서...살인·고문·성폭행(연합뉴스) 美인권차관보, 김정은 ICC 제소 지지...제재명단 계속 확대(연합뉴스)
	7.2	北외무성, 美 인신매매 보고서에 “언어도단” 비난(연합뉴스)
	7.7	北, 중국내 근로자 탈북 막으려 보위부 요원 300명 급파(연합뉴스) 북,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겨(자유아시아방송)
	7.8	北외무성, 美김정은 제재에 “최고존엄 포함은 선전포고” 성명(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7.4
	7.7	정부, 김정은 포함 美인권제재에 “환영·책임성 명확화 의미”(연합뉴스)
	7.8	통일부, 北 반발한다고 인권개선 노력 멈출 수 없다(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7.7	올해 상반기 탈북민 749명...작년 대비 22% 증가(연합뉴스) 납북자단체, 민변에 납북자 인신보호 구제청구 위임(연합뉴스)
대북지원	7.5	IFRC, 북 재난관리법 정비 지원(자유아시아방송)
	7.6	UN “북, 엘니노로 물 저장고 35% 뚫”(자유아시아방송)
	7.7	WFP, 2018년까지 北취약계층 170만명에 식량지원(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7. 4.

■ 中, 북중접경 탈북자 지원단체 한국인 활동가 수십명 추방(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중접경에서 활동하던 한국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활동가 수십명을 사실상 추방한 것으로 밝혀짐.
- 4일 북중접경 복수(複數)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출의 여파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하순 접경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지원활동가들에게 6월 말까지 중국을 떠나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 접경지역의 한 소식통은 “활동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탈북자들과 1~2개월씩 함께 살면서 보살펴주고 한국사회 적응을 도운 것으로 안다”며 당분간 중국 동베이(東北) 지역에서의 탈북지원 NGO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

■ 개소 1주년 맞은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미국의소리)

-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권고함.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음.
- 당시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있다”고 강조함. 북한인권결의안에 나타난 북한인권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임.
- 시나 폴슨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탈북자 사회를 들여다 보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1년 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함.
- 폴슨 소장은 또 “올해 안으로 북한의 미결구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함.
-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힘.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 인권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한바 있음.

- 따라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 추궁을 시작한다면, 서울시무소에서 축적한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2016. 7. 6.

■ **김정은 적시된 美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 금주중 나올듯(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이르면 금주 중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정부는 인권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김정은을 인권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무부의 금주중 보고서 제출 시점에 맞춰 인권제재 대상자가 동시 발표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유럽, 북한노동자 인권유린 대책마련 시급(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의 북한 해외노동자를 연구해 온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 연구팀은 6일 라이덴대학에서 ‘유럽연합 내 북한인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노동자를 이용한 외화벌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북한노동자가 있는 폴란드, 즉 뿔스까를 예로 들면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가 한해동안 벌어들인 북한 측에 안기는 외화벌이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액 3천만 유로, 미화로 약 3천300만 달러의 절반을 넘는다고 추산함.
- 한편 이번 보고서 발표회에서는 조선회사인 크리스트와 또다른 조선업체인 나우타 등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업체의 명단도 공개돼 눈길을 끄.

■ **폴란드내 북한노동자, 北 정권 외화획득 수단…차단 나서야(연합뉴스)**

-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이 북한 측에 안긴 연간 외화벌이 규모가 이미 작년 기준 유럽연합(EU)과 북한 간 교역액 3천만 유로(386억 원)의 절반을 넘었다는 추산이 나옴.
-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 실태를 다뤄온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 연구팀은 6일(현지시간) 「EU 내 북한인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 최종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노동을 통한 외화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추정함.
- 보고서는 이어 “북한 해외노동자의 이런 파견 시스템은 비단 유럽 내 뿐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국의 시급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특히 연구팀을 이끈 브뤼커 교수는 “북한의 해외노동은 글로벌 이슈”라며 관심을 재차 촉구했고, 네덜란드의 아흐네스 용에리우스 유럽의회 의원은 “EU가 간접적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에 돈을 대는 꼴”이라며 “우리는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가세함.

2016. 7. 7.

■ **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직접제재…개인 15명-기관 8곳 인권제재(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림.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미국이 제3국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임. 이에 따라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임.
-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함.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태라금 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인권제재 이유를 밝힘.
-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무우 전 국방위 부위원장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임.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임.

■ **中, 김정은 인권제재 관련 “공개적 압력 적대시 정책 반대”(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7일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처음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힘.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이어 중국은 유엔 인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2270호 제재결의안을 엄격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주장에 부응해 북핵 문제를 다시 대화와 협상의 궤도에 올려달라고 요청함.

■ 김정은 첫 직접제재에 日정부, 환영…北인권문제 관계국과 연대(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으로 올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에 관해 논평해달라는 연합뉴스의 요청에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우려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인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미국의 자세를 환영한다”고 7일 밝힘.
- 외무성은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인권·인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계속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임.

■ 북 해외노동자 인권 탄압에 국제 사회 압력 강화(연합뉴스)

-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해외 노동력 송출에 본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함. 미국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 총 5만 2천 명 정도의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러시아, 중국, 몽골,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등의 공장, 건설 현장, 식당, 보건 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7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지난 3월 미국이 북한 해외노동자 반출과 관련된 당국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최근 미국 국무부의 인신 매매 방지 보고서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반출이 북한이 최악의 인권 국가로 지목되는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고 설명함.
-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1년에 몽골의 울란바트르에 파견된 북한 건설 노동자를 인용해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을 했다면서, 임금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점점 더 줄어들어 약 1년간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 노동 기구(ILO)는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이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전함.
- 신문은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 2만명이 있고, 중국에는 1만 9천명, 쿠웨이트에는 5천명, 몽골에 1천 300명-2천명, 아랍 에미리트에는 2천명, 앙골라에 1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함.

■ 유럽북한인권단체 “北, ‘국가 지원 노예’ 유럽에 보내”(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자 수백명을 ‘국가가 지원하는 노예’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보내고 있다고 북한인권단체가 지적함.
- 6일(현지시간) 런던에 소재한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에 따르면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0~12시간씩 주 6일 일하지만, 이들이 받는 급여의 90%가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폴란드의 조선소, 건축 현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고, 이외 몰타의 레저, 의류기업에도 고용돼 있음.

- EAFRINK 마이클 글렌다닝 대표는 북한 정권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밝힘. 북한 근로자들은 적절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고, 여권을 빼앗겨 아동의 제한을 받고 계속 감시받는다면 “북한은 인권 유린을 EU로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북한 당국이 노동자의 탈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혼에 자녀를 둔 이들을 선별해 사실상 가족을 인질로 삼는다”고 덧붙임.

■ 북한인권단체, 남북인권대화서 국군포로 송환문제 다뤄야(연합뉴스)

- 국가인권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게 돼 있는 남북인권대화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올바른 남북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에는 정부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남북인권대화에서 북한 내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과 납북자, 국군포로의 송환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북한 정치범 석방 등을 다룬다는 내용이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 소장은 또 남북인권대화에서 중국 등으로 탈북했다 강제로 북송된 이들의 생사확인에도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임.

2016. 7. 8.

■ 반기문, 北인권 개선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 영향력 기대(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함.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처음으로 강력한 인권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반 총장의 코멘트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함.
- 반 총장은 또 왕이 부장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라고 강조함.

■ 고달픈 외화벌이 北노동자...가족에게 1년간 한푼도 못 보냈다(연합뉴스)

- “1년 동안 가족에게 한 푼도 보내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북한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함. 북한의 외국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의 강압적인 통치와 정치범수용소 등과 함께 인권 유린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또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시선을 끌고 있음.
- 몽골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나라로 협약에 따라 북한의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음. 적게는 1천300명, 많게는 2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5만2천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비중은 크지 않다. 그래도 러시아(2만 명), 중국(1만9천 명), 쿠웨이트(5천 명)에 이어 4~5위권임. 다른 나라에 파견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몽골에 나온 북한인도 대부분 건설공사 현장이나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함.

■ 인권유린실태 고발한 美 북한인권보고서…살인·고문·성폭행(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낱알이 담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국무위원회(전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 대해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수령’이며, 북한 체제에서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명시함.
- 특히 “김정은이 최고 자리에 오른 후 사형당한 고위 관리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급 인사가 은밀히 사라진 뒤 숙청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김정은에 대한 권력 내부의 공포감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함. 또한, 북한 당국은 8만~12만 명의 정치범을 ‘관리소’에 가두고 아무런 사법절차 없이 살인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기술함. 보고서는 특히 인민보안부를 ‘고문 기관’을 지목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성폭행, 천장에 장시간 매달아 두기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힘.
- 국무부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됨.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미국의 첫 제재대상에 올린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재판 없이 처형되고, 강제노동과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함.

■ 美인권차관보, 김정은 ICC 제소 지지…제재명단 계속 확대(연합뉴스)

-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지지한다며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함.
-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작성과 김 위원장에 대한 사상 첫 직접

제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7. 2.

■ 北외무성, 美 인신매매 보고서에 “언어도단”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미국은 지난 6월 30일 ‘2016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 데서 온갖 날조자료들을 늘어놓으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을 또다시 악랄하게 걸고 들었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걸고 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미국이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인신매매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영상에 먹칠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이목을 딛 데로 돌리며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흥심을 품고 이러한 문서들을 꾸미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미국은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를 똑바로 보고 어리석은 적대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상대하여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제도를 어찌 보려는 기도를 드러낼수록 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016. 7. 7.

■ 北, 중국내 근로자 탈북 막으려 보위부 요원 300명 급파(연합뉴스)

-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을 비롯한 탈북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당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300여 명을 현지에 급파해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지난 6월 말 30~40대의 젊은 보위부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해 북한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통제 업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함.
- 다른 소식통은 “이 같은 상호 감시조직은 북한 내부에서 운영하는 감시 조직망과 비슷한 형태”라며 “각 조의 조장은 자신이 감시해야 할 대상(조장)이 누군지 잘 알지만,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조장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함.

■ 북,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겨(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선 주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함. 그런데 북측 당국은 “공화국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북측 외교통출판사가 2015년 6월 발행한 대외선전용 책자 ‘조선에 대한 리해’ 인권 편에 담긴 내용임
-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에 총 91쪽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는 “공화국에서는 헌법, 형사관계법과 규정에 의하여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면서 “사형은 극히 제한된 경우 특별히 엄중한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고 덧붙임. “공화국에서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이나 처벌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임.
- 이밖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도 북한에서는 보장된다는 내용이 이 책자에는 담겨 있음. 다만 이런 권리를 북한은 “원만히” 또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기술한 점이 눈에 띈.
-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등 8개 기관을 포함하는 ‘인권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한 것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유엔 총회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를 거론한 데 반해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꼭 집어 거명해 북한의 이른바 ‘최고 존엄’을 건드림.
-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조치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금번 조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2016. 7. 8.

■ 北외무성, 美김정은 제재에 “최고존엄 포함은 선전포고” 성명(연합뉴스)

- 북한은 8일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으로 올린 것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함.
- 북한 외무성을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일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며 이같이 말함.
- 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을 다 바쳐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며,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의 전부”라며 감정을 올린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7. 4.

■ 북한 인권단체, 남북 인권대화 시행 방향 명시 촉구(연합뉴스)

-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는 북한인권법상의 남북 인권대화와 관련해 시행 방향 규정의 명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 예정이라고 4일 밝힘.
- 기자회견에선 북한 주민과 북한 내 억류 중인 한국 국민, 납북자, 국군포로, 강제북송된 탈북민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북한인권법 시행령의 올바른 규정을 촉구함.
- 기자회견에는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회장, 최성룡 전후남북피해가족연합회 회장, 북한 억류자 김정욱 선교사후원회의 주동식 회장,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임.

2016. 7. 7.

■ 정부, 김정은 포함 美인권제재에 “환영·책임성 명확화 의미”(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힘. 정부는 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김정은을 제재리스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함.
-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으며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보내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억제할 효과를 의도했다”고 평가함. 이 당국자는 “이번 제재가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를) 억제하는데 실질적 효과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가는데도 실질적 유효성이 있다”고 강조함.
-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미국이 북한 인권개선전략 보고서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인권개선전략 보고서에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한 나라의 명단, 북한 노동자 접수국 명단, 라디오 등을 통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도록 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전문】

1. 정부는 '16.7.6(수) (미국 현지시각)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2. 금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대북제재법(H.R. 757) 발효(2.18),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발표(3.16),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6.1) 등에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

3. 또한, 금번 조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및 유럽 의회 결의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다. 끝.

2016. 7. 8.

■ 통일부, 北 반발한다고 인권개선 노력 멈출 수 없다(연합뉴스)

- 통일부는 8일 미국이 감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리스트에 올리자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 정 대변인은 “북한 정권은 이번 조처에 담긴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책임 규명 의지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인권상황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북한 태도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번 조처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일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며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사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7. 7.

■ 올해 상반기 탈북민 749명…작년 대비 22% 증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처음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수가 완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74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함.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민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탈북민이 감소한 것은 북한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북한 당국이 탈북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 방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통일부 당국자는 “하니원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춰 안성시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각계각층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힘.

■ 납북자단체, 민변에 납북자 인신보호 구제청구 위임(연합뉴스)

- 납북자 가족단체가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들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 위임을 요청함.
- 최성룡 납북자기족모임 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6명의 인신보호 구제 청구 건을 민변이 맡아달라고 요청함.
- 민변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4월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인신구제 사건을 맡고 있음.

5. 대북지원

2016. 7. 5.

■ IFRC, 북 재난관리법 정비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이 재해에 매우 취약한 국가” 라면서 북한이 재난을 더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 국제적십자사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재난 대응과 피해 감소를 위한 법 체계’를 주제로 하는 학술 회의를 주최했다고 설명함. 이 학술회의에는 북한의 법률가, 중앙 및 지방 관련 관리자, 조선적십자회, 국제적십자사, 그리고 특히, 베트남 즉 월남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함. 학술 회의에서는 특히, 재난 피해 감소를 위해 어떤 법 체계가 준비돼 있어야 하는지, 법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가 논의됨.
- 또, 북한의 현 재난법이 국제사회의 재난 지원 요건 등이 포함되며, 새롭게 홍수 예방법이 고안될 것이라고 국제적십자사는 설명함.

2016. 7. 6.

■ UN “북, 엘니뇨로 물 저장고 35% 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6일 북한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지난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고, 올해 1월 10일 현재 ‘물 저장고’가 관개에 필요한 양에 비해 약 65%가 부족하다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는 ‘엘니뇨, 농업, 식량안보, 영양에 대한 조기 대응과 반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모두에 취약하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엘니뇨로 인한 가뭄, 홍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복구 사업을 펼치는 데 총 1천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함.
- 하지만 이 기구는 이 중 925만 달러가 유엔의 중앙긴급구호기금과 식량농업기구 내부 자원으로 충당됐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2016. 7. 7.

■ WFP, 2018년까지 北취약계층 170만명에 식량지원(연합뉴스)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2018년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170만명에게 15만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WFP 대변인은 “향후 2년 6개월 간 진행될 새로운 북한 지원사업인 ‘북한에 대한 장기구호

및 복구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말함. 지원 대상은 임신부 40만 명, 영양실조 어린이 86만 명, 자연재해 피해 지역 주민 등 총 170만 명임. WFP는 이번 사업에 총 1억2천590만 달러(1천471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WFP는 지난 2년 6개월간 진행했던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은 지난달 종료함. 이 사업으로 지난달에만 임신부와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 주민 64만 명에게 영양강화 식품이 지원됨.